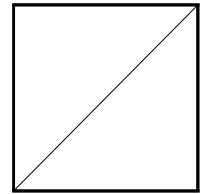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3. 8. (제 4 차)

의
결
사
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8.

1. 의결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의무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의 변경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안 제5조)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다.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안 제9조)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라.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안 제9조)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안 제18조)

이 법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강화 (안 제19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5% 이내로 제한함

사.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안 제21조)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

용하도록 함

아.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29조·제32조·제37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채권의 양도·채무자 주택의 경매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채권의 양도·채무자 주택의 경매를 제한함

자.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30조)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차.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31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카. 채권양도시 양수인의 선정기준 마련 (안 제33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양수인을 선정할 때 채권양수인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연체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한 서류와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타.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35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파.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36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추심위탁 상대방 및 위탁업무범위의 제한 (안 제38조)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가 아닌 자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행위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추심행위 적발시 추심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거.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39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너.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44조·제45조·제46조)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안 제47조·제48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사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교섭 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제한 (안 제49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총 수수료 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며.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51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버.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안 제68조)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금융기관도 점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서.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69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범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어.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화 (안 제70조)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조정
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외부에 예탁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신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신용카드의 발행 및 그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연불판매(延拂販賣)·시설대여·할부금융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
- 나. 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의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여신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 등을 받아 대부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카. 「은행법」에 따른 은행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 등을 받
 아 대부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3. “채권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가. 여신금융기관
 나. 대부업자
 다. 채권매입추심업자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
 금
 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
 합자산관리회사

- 사.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다만, 제29조부터 제34조, 제37조부터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 및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유동화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를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 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 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더. 그 밖에 금전의 대부, 지급보증 또는 채권의 양수 등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개인채무자”란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개인채권”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말한다.

6. “소비자신용관련업”이란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을 말한다.
7. “소비자신용관련업자”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를 말한다.
8.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부업자”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추심”이란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상환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상환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채권추심자”란 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채권금융기관
 - 나. 채권수탁추심업자
 - 다. 위임직채권추심인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채권의 추심을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자

14. “채권수탁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채권

나.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에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마. 다른 법률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15. “채권수탁추심업자”란 채권수탁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17. “채권매입추심업”이란 개인채권 또는 그 밖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8. “채권매입추심업자”란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연장, 원리금 감면, 새로운 대출의 실행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0. “채무조정교섭업”이란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조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채무조정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및 문의
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 이후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의사·정보 전달 등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21. “채무조정교섭업자”란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2.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로 본다.
23.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24. “금융관계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금융업 관련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로 담보된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및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비자신용관련업

제1절 허가요건 및 절차

제5조(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①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의 수탁추심을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요건) ①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일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다.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2. 채권수탁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5.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6. 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채권수탁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8. 5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는 것
 9. 제7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것
-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2호의 허가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8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겸영업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8조제4항에 따라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62조제1항본문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영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채권수탁추심업자인 법인이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채권수탁추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9조(대부업자등의 등록)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3.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4.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호에 따른 업(業)을 영위할 수 있다.

1. 대부업 :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금융기관

나.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해당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

3. 채권매입추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금융기관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채권의 매입 및 추심을 업(業)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무조정교섭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나. 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받은 추심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또
는 시·도지사(이하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지분율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채무조정교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발기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출연(出捐)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5.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경영하려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8.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9. 제70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금액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등은 신청인이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4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호의 변경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등은 제5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⑧ 대부업자등이 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⑨ 대부업자등은 제4항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금융위원회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6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⑫ 제63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금융위원회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등록증의 반납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의 요건) ① 대부업자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3. 제7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것
4. 제13조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5.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보호가 가능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6.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이 제14조제2항에 적합할 것
7. 최근 1년간 제9조제10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8. 최근 5년간 제63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9조제10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9.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0.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설립발기인(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등록요건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제11조(등록의 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9조제7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등은 신청인이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9조제5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등록부에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갱신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자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제13조(등록업자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이전에 대부업자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

조정교섭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3. 제9조제9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배구조 및 업무

제14조(임직원 등의 자격요건)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선임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해임, 면직되거나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4.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5.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취소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⑤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거나,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업무총괄 사용인)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양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업무의 수행) ① 이 조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별로 해당 호 각 목의 금융업무를 그 업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대부업자

가. 대부중개업

나.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대부중개업자

가. 대부업(대부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 :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허가받거나 등록한 소비자신용관련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별로 해당 호 각 목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가.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 :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채무조정교섭업자

가.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상황의 개선, 신용도의 관리방법, 채무의 정리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업무

나. 채무조정 합의의 성립 이후 상환일정 안내, 연체관련 통지 등 개인채무자의 채무상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채권금융기관에 고지하는 업무

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소비자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총자산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매입대금 중 매

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하여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상호) 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업종별로 그 상호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 “신용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 및 바목의 기관인 경우

나.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겸영하는 경우

2. 대부업자 : “대부”

3.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

4. 채권매입추심업자 : “추심” 또는 “채권회수”

5. 채무조정교섭업자 : “채무조정” 또는 “채무관리”

② 소비자신용관련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로서 총영업수익 중 소비자신용관련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소비자신용관련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호
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
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
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으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
람

마.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⑤ 소비자신용관련업자별로 보호기준에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 및 보호감시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성립과 변동

제1절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제2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그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5. 대부이자율(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6.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7. 제6호의 상환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상환을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8.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9.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등 조기상환조건

12. 연체이자율

13.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
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
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피보증채무의 금액

4. 보증기간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무상환을 완료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1항제5호의 대부이자율

3. 제1항제6호의 상환기간

4. 제1항제12호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3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2. 제3항제4호의 보증기간

3. 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8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제23조(과잉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도 및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대부업자의 경우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금의 제공과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상환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 ④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 ⑤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⑥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에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⑧ 제9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이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7.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7.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4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⑦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26조(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제27조(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등은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부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9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

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연체 처리

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호는 제외한다.

1. 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원인
3.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효과
4. 개인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예정대로 상실

된다는 내용

5.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0조(연체이자의 부과) ①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를 경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3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양도

제31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자로부터 개인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으로서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합의 성립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권

3.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채권
 4.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상속인이 확정된 채권은 제외한다)
 5. 채권의 존부(存否)나 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된 채권
 6. 그 밖에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④ 채권금융기관은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대상 채권
2. 채권의 양도 예정일

3. 개인채무자는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채권의 양도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채권 양도의 절차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권(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기 위해 양수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채권 양수대금의 조달방법
2.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3.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과 발생빈도, 민원처리 체계 및 처리내역
 4. 양수인이 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 기준의 내용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 내부기준의 내용 및 매입채권 양도 현황
 6. 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추심위탁 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위탁 현황
 7. 제46조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현황
 8.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 및 보유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중단 현황
 9.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내역
 10. 그 밖에 양수인의 업무수행 역량 및 개인채무자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의 원인서류, 원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양도 내부기준) ① 개인채권을 양도하려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임직원이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지키고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채권양도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 내부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추심

제1절 채권추심자의 준수 사항

제35조(채권추심의 제한 및 착수 절차) ①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채권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으로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통지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한 채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합의 성립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성립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채권
4. 개인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를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권

6. 그 밖에 채권의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② 채권추심자(원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자기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채권의 추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부터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의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 독촉 등 수행하고자 하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어권의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

2. 그 밖에 신분과 추심권한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

④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자신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및 연락방법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

②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를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채권의 추심연락이 여러 채권추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④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개인채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7일간은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다만,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추심연락에 포함되는 행위 및 연락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주택경매의 예정의 사전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 및 경매신청 대상 주택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개인채무자는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경매가 예정대로 신청된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신청 예정일은 해당 개인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경매신청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추심 위탁

제38조(추심 위탁의 제한)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아닌 자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심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추심 위·수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추심 위탁의 절차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채권의 추심위탁 예정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

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의 사항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의 내용
3. 과거의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
4. 그 밖에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수행 역량 및 채무자보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위탁한 채권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개인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추심위탁 내부기준) ① 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임직원이 추심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지키고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수탁추심

제41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 행위 제한)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

2.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

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

다. 다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소속으로 등록된 자

라. 제42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자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위임직채권추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조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자신이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제45조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채무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위임직채권추심인)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4.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금융위원회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책임)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

3. 제36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41조제4항

제5장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무의 조정

제1절 채무조정 절차

제44조(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①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연체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채권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에 제45조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개인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3.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하기 위해 채무조정의 요청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고, 제2항에 따라 안내하는 경우에 개인채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환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채권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개인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접수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완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2.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된 채무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재요청하는 경우
3.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요청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를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채권금융기관의 심사 및 채무조정 성립)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46조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채무조정안의 제안
2.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 거절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심사한 결과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추심(위탁을 통한 추심을 포함한다)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2회 이상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로 본다.

⑤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채무조정 내부기준) ① 채권금융기관은 그 임직원이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채무조정 내용의 결정 기준(이하 “채무조정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의결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개인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과 채무금액·연체기간 등 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의 감면, 상환기일의 연장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연체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증빙되고, 그러한 사정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이 운영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47조(신의성실 의무 등)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조정교섭을 의뢰한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에 개인채무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설명의무 등)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에게 제44조에 따른 채무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

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수단의 내용을 비교하여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제1항의 면담·질문에 따라 파악한 정보를 고려할 때 개인채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교섭 대행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의 대행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개인채무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수행하고자 하는 채무조정교섭업무의 내용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행할 교섭의 절차 및 개인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3. 예상 가능한 채무조정의 내용
4.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점의 하락 및 채무원리금의 증가 가능성
5. 개인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방법 및 그 수준
6.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의 사항에 대하여 개인채무자가 설명을 청취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교섭

수행에 대한 수수료(이하 “교섭수수료”라 한다) 및 채무조정 합의의 성립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 이외의 다른 대가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대가 이외에 다른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그 밖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채무자에게 상환지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2. 수행하고자 하는 채무조정교섭 업무의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3. 개인채무자를 대리하여 제45조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개인채무자의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보관·예치하는 행위
 5. 자기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채무자를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행위
 6.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는 채무조정교섭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2.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예상결과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3. 자신을 특정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지정 교섭업체라고 지칭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 등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

5.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제6장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제51조(개인채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장래 회수가능성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의결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채권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2.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개인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처리절차 및 소멸시효 내 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대부금융협회 등

제1절 대부금융협회

제52조(대부금융협회의 설립 등) ①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부금융협회(이하 이 절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회비의 분담과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금융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협회의 설립 및 정관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3조(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 · 권고
 3.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 · 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협회 가입자격) ①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5조(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

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57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5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기타

제58조(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 및 제재

제60조(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감독) ① 금융위원회등은 대부업자등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고섭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2조(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허가나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주식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4.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단,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인에 대한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채권금융기관(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⑦ 금융위원회(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는 퇴임·퇴직한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대부업자등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3.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가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9.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대부업자등이 영업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3. 해당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청문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⑥ 금융위원회등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2.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3.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4.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⑧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 이었더라면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

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9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추심업의 영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매각 상대방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위탁을 통해서만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다.

제6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
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처
분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6조(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급가산금) ① 제65조에 따른 과징
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7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중개업자등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불법·부당한 대출모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제39조제3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대부중개업자등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상호 간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9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6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70조(영업보증금의 적립) 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보증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③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업종별 영업보증금의 적립한도, 사용 및 유지방법,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공제 가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대부금융협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등은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금융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분쟁조정) 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무등록 채무조정교섭업 영위 필요성에 대하여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수탁추심업을 영위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26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추심, 신용정보, 채무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소비자신용관련업을 하게 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

를 받은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6. 제28조제4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7.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권을 양도한 자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개인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12.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자
14. 제62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

분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자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6.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한 자
8. 제22조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
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
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4항, 제5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채권수탁추심업자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43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

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자
 1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자
 14. 제49조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자
 15. 제50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6.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
 1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자
 18.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0.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21. 제61조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을 추심한 경우
4. 채권수탁추심업자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43조제2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외의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를 거부한 자
6.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중단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재무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한 자
9.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및 그 밖의 대가를 수취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거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채권을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개인채권을 양도한 자
4.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추심연락을 한 자
5.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자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자
8.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위탁 예정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한 자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1항 또는 제1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6.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7. 제18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의 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12. 채권수탁추심업자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43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4. 제52조제7항에 따른 대부금융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6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등이 부과·징수한다.
- ⑥ 제1항제11호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면 제11조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업무의 수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대부와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겸영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제18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총자산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매입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 중에 “신용정보”를 사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채무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체이자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

초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발생한 개인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원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개인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채권추심의 제한 및 착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채권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및 연락방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추심 위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는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추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심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개인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15조(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는 채권추심회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대부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대부금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제52조에 따른 대부금융협

회로 본다.

제20조(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범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대부업자등의 범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본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또는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는 제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부칙 제4조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본문”으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다른 채권추심업”을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⑩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추심 업무를”로 한다.

⑪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제1호의 죄
법률 제1182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⑫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2호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2조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각각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개인신용평가업 및 신용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채권추심업”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이하 “채권수탁추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

각 또는 함께”를 “신용조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6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을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제1항”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서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2조 및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권수탁추심업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권수탁추심업

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2. 채권수탁추심업

제1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각각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MyData)·채권추심 또는”을 “(MyData)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3조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5절 채권추심업을 삭제한다.

제32조제6항제1호 중 “채권추심회사가”를 “채권수탁추심업자가”로, “채권추심회사 또는”을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추심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4호 각 목에 따른 채권”

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채권추심회사는”을 “채권수탁추심업자는”으로, “채권추심회사 사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사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법”으로 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수탁추심업자

제47조제1항 중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를 “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을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MyData)·채권추심”을 “(MyData)”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⑯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⑰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금융업 및 대부업”을 “금융업·대부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8항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로 한다.

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호 및 제10호”를 “제9호”로, “채권추심회사”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권(같은 법 제3조 본문에 따른 개인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⑲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1호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40조제5항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채권매입추심업자, 미등록대부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로 한다.

1.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및 채권수탁추심

업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채권추심업”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부수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는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이하 “채권수탁추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8항 단서 중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

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처분 사유

(제62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63조제3항·제7항 관련)

1.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고용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8.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9.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겸 영업무를 한 경우
1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
1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제19조를 위반하여 총자산한도 또는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추심”, “신용정보” 및 “채무조정 또는 채무관리” 라는 문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소비자신용관련업을 하게 한 경우
19.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21.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4. 제22조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26.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7. 제24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28.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30.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26조를 위반하여 해당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2.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3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34.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3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권을 양도한 경우
3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로부터 개인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3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40.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자채권을 사전에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면제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거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채권을 양도한 경우
 4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개인채권을 양도한 경우
 4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을 선정할 때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4. 제33조제2항에 따른 서류와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양도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4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을 추심한 경우
 4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4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0. 추심업무를 하면서 제3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52.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추심연락을 한 경우
 53.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5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신청 예정일을 지정한 경우
 56.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5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경우
58.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59.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위탁 예정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0.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6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위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4. 제4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
6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6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한 경우
67.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68.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69.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0.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외의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를 거부한 경우
71. 제44조제5항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필요한 보완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7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7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
74.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7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기관에 거짓의 정보를 전달한 경우
7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77.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구제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78.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한 경우
79.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80.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8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경우
8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83. 제49조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착수금 및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84.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및 그 밖의 대가를 수취한 경우
85. 제50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6.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87.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88.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89.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90.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1.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92. 제6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93.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94. 제61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5. 제61조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 96. 제62조제2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97. 제62조제4항제4호, 제62조제6항제4호 또는 제6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8. 제62조제4항제5호, 제62조제6항제5호 또는 제63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9.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자
- 100.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101. 그 밖에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2